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 (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9
----------	------

발의연월일 : 2012. 10. .

발 의 자 : 김동수, 김동규, 김영철, 김정택, 김철진,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송두영,
신성철, 윤미라, 윤태천, 이민근, 이형근,
전준호, 정승현, 정진교, 한갑수, 함영미,
황효진(21인)

1.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도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은 안산시의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이는 계획 수립시 인접지역내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용시설의 과잉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지침으로 하는 규정을 무시한 정책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 함.

2. 주 문

○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도 공립유치원 신설 및 증설계획’을 발표하고 각 시의 교육지원청에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첫째, 정책 결정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지역별, 시설별 취원 유아 현황이나 지역별 미취원 유아 현황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 정책이 결정되었다.

○ 둘째,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은 학교는 13개 학교 중 단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단지 학교장의 결정만으로 확정되었다.

○ 셋째, 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 유아교육 시설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으며 특히 지속적인 출산을 저하로 유아교육 대상자가 매년 200~400명이나 감소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공급과잉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결정하였다.

○ 넷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현행 5세부터 3, 4세까지 확대 시행하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한 결과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2011년 80%에서 2012년 9월말 76%로 오히려 4% 감소되었음을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은 허구임을 알 수 있다.

○ 다섯째, 교육지원청은 2012년 미취원 아동의 인원은 전체 취원 대상 아동 21,672명 중 약 11%인 2,331명이라고 발표하면서 미취원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 신·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산시의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미수용 정원이 5,373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지원청이 발표한 미취원 아동 2,331명을 수용하고도 오히려 3,042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 여섯째, 누리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등 각 시설들의 최근 3년간 정원대비 취원율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2010년 83%, 2011년 85%, 2012년 87%로 매년 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 역시 2010년 69%, 2011년 70%, 2012년 77%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공립유치원만 유독 2010년 88%, 2011년 80%, 2012년 7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공립유치원이 안산시민으로부터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으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일곱째,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안산지역에 16개 학급 305명을 공립유치원에 수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예산은 시설비, 내부 비품비, 설계비의 명목으로 약 5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신·증설이 이루어질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 여덟째, 경기도교육청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송한 2012.7.26일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5667호 공문’의 내용 중 ‘2013~2015학년도 유아수용계획 지침’을 보면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지침으로 ‘유아교육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여부를 판단할 것’과 ‘매년 공립유치원의 정원보다 입학할 희망하는

지원아 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 수용시설 확충을 추진할 것', 그리고 '인접지역 내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요시설 과잉을 방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교육청은 스스로 지침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적정한 유아 수용을 위하여 학년별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철저히 무시하였다.

○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8만 안산시민과 함께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 실패로 겪을 우리 아이와 학부모들의 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3. 건의문 : 별첨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철회 건의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도 공립유치원 신설 및 증설계획’을 발표하고 각 시의 교육지원청에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 결정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지역별, 시설별 취원 유아 현황이나 지역별 미취원 유아 현황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 정책이 결정되었다.

둘째,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은 학교는 13개 학교 중 단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단지 학교장의 결정만으로 확정되었다.

셋째, 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 유아교육 시설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으며 특히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유아교육 대상자가 매년 200~400명이나 감소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공급과잉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결정하였다.

넷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현행 5세 부터 3, 4세까지 확대 시행하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한 결과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2011년 80%에서 2012년 9월말 76%로 오히려 4% 감소되었음을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은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교육지원청은 2012년 미취원 아동의 인원은 전체 취원 대상 아동 21,672명 중 약 11%인 2,331명이라고 발표하면서 미취원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 신·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산시의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미수용 정원이 5,373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지원청이 발표한 미취원 아동 2,331명을 수용하고도 오히려 3,042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여섯째, 누리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등 각 시설들의 최근 3년간 정원대비 취원율을 비교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2010년 83%, 2011년 85%, 2012년 87%로 매년 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 역시 2010년 69%, 2011년 70%, 2012년 77%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공립유치원만 유독 2010년 88%, 2011년 80%, 2012년 7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공립유치원이 안산시민으로부터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으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곱째,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안산지역에

16개 학급 305명을 공립유치원에 수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예산은 시설비, 내부 비품비, 설계비의 명목으로 약 5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신·증설이 이루어질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여덟째, 경기도교육청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송한 2012.7.26일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5667호 공문’의 내용 중 ‘2013~2015학년도 유아수용계획 지침’을 보면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지침으로 ‘유아교육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여부를 판단할 것’과 ‘매년 공립유치원의 정원보다 입학할 희망하는 지원아 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 수용시설 확충을 추진할 것’, 그리고 ‘인접지역 내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요시설 과잉을 방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교육청은 스스로 지침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적정한 유아 수용을 위하여 학년별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철저히 무시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안산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00여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유아 교육과 보육을 책임져 온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존명을 억압하고 있다. 대기업이 막대한 조직과 자금을 앞세워 중소기업과 골목상권까지 유린하는 것처럼 막강한 행정력과 예산을 앞세워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이자 공급자인 시민과의 어떠한 논의 없이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안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78만 안산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오만방자한 행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규정 위반과 이로 인해 나타날 사회적 갈등비용, 또한 공급과잉에 따른 정책 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8만 안산시민과 함께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 실패로 겪을 우리 아이와 학부모들의 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2년 10월 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